

경제관계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6.3)

-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.
 - 4월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전산업의 반등을 견인했고
 - 5월 수출은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8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이러한 경제회복의 온기가 “민생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”되도록 만들겠습니다.
 - 나아가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, 국가 R&D가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“역동경제 빌드업(Build-up)을 시작”하겠습니다.
- 다만, 이를 지원할 다수의 경제·민생 법안이 며칠 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
 - 정부는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히 재정비하여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-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 더욱 정성껏 설명드리겠습니다.

[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]

-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맞바람을 이겨내며 전진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- 먼저, 증가한 수출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확대합니다.
 - 정책금융은 당초보다 5조원 확대한 365조원을 공급하고,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프로그램도 2조원 확대*하겠습니다.

* 5대 시중은행의 정책금융 연계 수출 우대상품 공급규모 : 5.4 → 7.4조원

- 업종별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력 강화도 추진합니다.
 - 나프타·LPG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·LPG에 대해 연말까지 0% 관세율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 - 또한, 선박 건조 시 작업자 승선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등 주력품목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.
- 아울러 우리 기업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.
 -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을 확대하고, 소비재 등 내수 중소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.

[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]

-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.
 - 이를 위해 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」을 논의합니다.
 - 이번 대책은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,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.
 - 첫째, 졸업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강화하고, 중견기업 안착을 유도하겠습니다.
 -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“졸업 유예기간”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, 상장 중소기업은 밸류업 지원을 위해 7년까지 추가 연장하겠습니다.
 -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점감구간을 신설하여 추가 3년간 R&D와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- 둘째, 중견기업 도약 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‘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’을 신설하겠습니다.
 -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3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기업별 전담 디렉터가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면, 바우처를 통해 다양한 성장서비스*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- * M&A, 해외진출, 재무관리, 특허(IP), R&D 등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

- 셋째,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
- 유망 중소기업이 민간 투자자와 매칭될 수 있도록 공공이 보유한 기업별 기술과 재무정보를 적극 개방하겠습니다.
- 예비·초기단계 중견기업의 민간 금융시장 자금조달을 지원하고, 민간 투자자 유치 기업에 대한 R&D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.
-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.

[R&D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개편 방안]

[기술료 제도개선 방안]

- 한편, 첨단기술 육성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.
- 정부는 2024년을 “선도형 R&D로의 대전환 원년”으로 삼고 R&D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겠습니다.
- R&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, 보완 절차를 마련해 재정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겠습니다.
- 또한, R&D 일몰제를 폐지하여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- 바이오 R&D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인허가 등 현행 제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상용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다부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.
- 아울러 정부납부 기술료율*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도전적 R&D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.
- * R&D 참여기업은 'R&D 성과물을 통해 창출한 수익'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
- 이어서, 안건과 관련하여 중기부 장관, 과기부 장관, 산업부 차관의 자세한 말씀이 있겠습니다.
(중기부 장관, 과기부 장관, 산업부 차관 모두발언)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